"탄소중립 전북농업 로드맵 필요"

국주영은 도의원 "퇴짜 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해야… 탄소인지예산제 시범 도입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더불어민주당)의원은 6일, 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을 비상사국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전북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추진 의지가 매우 미약했다"라며 전북도정을 질타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1℃가량 상승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기상재해로 최근 10년간 194명의 인명피해와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및 약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2040년에는 현재 상당수 농작물이 재배 부적합지역이 되고, 외래 병해충이 증가해 농업 부문의 탄소감축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게 국주 의원의 설명이다.

국주 의원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전북 농업정책엔 탄소중립이란 단어가 보이질 않는다"면서 저탄소, 생태농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탄소중립 농업정책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국주 의원은 퇴짜 수준에 가깝다며, 목표치 상향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 전망치 대비 27.8%로 약 4백만 톤을 줄여야 한다.

이는 목표량이 50%인 경북 등 다른 지자체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권고한 45%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국주 의원이 최초로 시범 도입을 제안한 '탄소인지예산'도 눈길을 끌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지역특색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토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감축목표와 정책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된 지금의 상황을 전북도가 직시하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곳곳 누비며 소통 강화

'전주시장 출마' 조지훈 전 경진원장 지역 경제 중심지 팔복동서 첫 행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주 곳곳을 누빈다.

'잘 나가는 전주, 속 시원하게 일하는 경제시장'이 되고자 제시한 주요 공약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결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은 '땀으로 전주를 적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전주투어의 첫 행보지로 팔복동 일대를 선택했다.

팔복동 일대는 전주 경제의 심장인 만큼 경제를 시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팔복동을 중심으로 그린 '팔·만·여 프로젝트'와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팔만여 프로젝트는 조 전 원장의 경제 핵심 공약으로, 팔복동, 만성지구, 여의동 지역을 경제 삼각벨트로 묶어 기업에 대한 혁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는 월드컵경기장에 투입된 예산만큼 지역 내 기업을 고도화하는데 집중,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 전 원장은 우선, 7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여성벤처기업협회, 전주첨단기업협의회,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 소공인융합협동조합, (사)글로벌청년수출협의회 등의 애로사항 청취하며 본격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경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담회 이후에는 제조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2차로 전주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은 물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주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 전 원장은 "그 누구보다 전주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전주투어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경제가 중요한 만큼 그 첫 걸음을 팔복동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제는 엘리트의 머릿속이 아닌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있다.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을 누비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전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도민 삶의 질 향상 적극 행정 추진해야"

김희수 도의원, 도정질의

"전북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공간인 전북도청사가 냄새나는 장애물에 가려져 도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6)은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1년 넘게 전북도청사를 에워싸고 있는 콘포사일리지로 인해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물론이고, 부패가 시작돼 악취까지 퍼지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거나 광장을 찾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전북 현안 중 김 의원은 전북의 수소 산업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자동차의 활성화는 수소 산업 초기에 견인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 했지만, 정작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그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에서 노선 버스회사가 수소 버스를 구매할 경우, 구매비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지만, 충전소가 없어 수소 버스 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꼬집으며, 이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상 기자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 진출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심상정(왼쪽)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선출결과 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위를 차지한 심상정 의원과 2위를 차지한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대선 경선 결선을 치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해야"

이명연 도의원, 전북형 신혼부부주택 '더 행복' 검토도 주문

전북도의회 이명연(환경복지위원장) 의원이 6일 사회복지심부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직 시·군 전입 등 증원 배치를 요구하고, 전북형 신혼부부주택 '더 행복 주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에 나선 이명연 의원은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승급체계가 없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지, 타 시·도 종사자들보다 낮은 처우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 예산 중 복지예산(2020년 세출결산기준 42.36%)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결과와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정책, 정신보건, 치매, 사회서비스원, 다문화가정지원 등 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시·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전입 등을 통해 증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혼부부들이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출산·양육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전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주거공간은 우리 전북도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주는 평생의 끈"임을 강조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전북형 '더 행복 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지역 공원 관리 조직 개편 필요"

송영진 전주시의원 "체계적 관리 차원 공원관리사업소로"

전주지역 공원 관리의 체계화 강화 등을 위한 행정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전주시의회 송영진(더불어민주당,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의원은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시의 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공원관리사업소'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현재 전주지역 도시공원은 249곳에 이르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및 도심 내 그린 인프라 확대 등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민원이 들어와야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도시공원과 녹지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팽창할 수밖에 없고, 기능적 면에서도 다양하게 확장하는 상황으로 사업소 조정과 인력 확대 등을 고려해 조직개편을 통한 선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청소, 공원, 녹지 분야 업무를 지난해 11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사업소 신설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정원도시와 자원순환의 연계성은 도시 미관 정비 차원에서 동일 지향점을 두고 있지만 두 분야 모두의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없고, 본청에 집중된 공원관리 업무는 인력도 줄고 대응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사업소의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해 공원관리사업소로 조직개편을 추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원관리를 바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박용근 도의원 "새장선 신설을"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의원이 제3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전북도정에 관련, 송하진 도지사에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동부산악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부터 전주, 장수를 잇는 가칭 '새장선'의 신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가 적은 것을 지적하며, '압축도시형' 도시계획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압축도시형 정책은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주요 도시기능을 거점에 모으는 도시계획 정책"이라며 "고령화 및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창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노을대교 건설의 조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의 미래, 새만금… 투자기업 유치 힘써야"

민주 김윤덕 의원, 국토위 국감서 "국책사업 새만금 개발 활성화 위해 투자유치 전략개발 · 제도개선 등 나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개발, 제도개선 등 기업 유치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양충모 새만금청장에게 "새만금개발청의 해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 총 6명으로, 지난 2019년 한 해만 중국 등 해외 각국에 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4번의 출장을 다녔다"면서 "하지만, 해외 기업 유치 실적은 겨우 한 건의 입주 계약을 앞두고 있을 만큼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청은 그동안 기업 유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변명을 해왔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총 사업비 22.2조원의 약 50%인 10.3조가 민간자본으로 개발돼야하는 새만금 사업은 민자유치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면서 "투자자와 기업의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새만금 사업을 바라볼 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미완의 땅 새만금'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개발, 제도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투자기업 유치 활동과 함께, 국내기업 법인세 감면 및 임대료 인하,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적극적으로 기업 인센티브 개선 등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만금청이 여건의 탓을 하기보다는 청이 기업 투자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계약으로 이행되도록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균특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을"

민주 김수흥 의원, 기재부 국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5일 열린 2021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최근 5년간 수도권 SOC사업에 대한 편성과 집행 현황을 지적하며, 균특회계의 목적에 맞도록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수도권 중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균특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균특회계로 집행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총 12건, 2조 1,863억원에 달한다.

김수흥 의원은 "균특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인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교특회계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